광주·전남 진보교육감-일선 교육장 주요현안 견해 비교해보니

학업성취도·교원 평가 상반 갈등 우려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육장 대부분 반대

무상급식·정당가입 처벌도 입장 엇갈려

6·2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진보성향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이들의 지휘 아래 일선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교육장들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물론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일선 지역 교육장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대구 북을) 의원이 지난달 15일~21일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의 주요 교육현안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새로 선출된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조사됐다.

교육감들이 임명하는 교육장들은 해당 지역 초·중등학교 지도감독권이 있으며, 광주·전남 교육장은 대부분 보수·중도 성향의 전임 교육감들이 임명했다. 이번 조사에 광주에서는 2명 교육장 모두가 응답을 했고, 전남에서는 22명 중 17명이 응했다.

조사결과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자유와 체벌금지 등이 주요 내용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광주와 전남에선 교육장들의 반대의견이 각각 100%와 58.9%였다. 전남에선 3명이 찬성했을 뿐이다.

학생집회 허용에 대해서도 광주 교육장 2명은 각각 반대와 적극 반대 의견을 내놓는 등 100% 반대했고, 전남에서는 88.2%가 반대했다. 전남 교육장 17명 중 15명이 학생집회 허용을 반대했고, 2명은 '보통'이라고 답변했다.

■광주·전남 교육감과 교육장의 현안별 의견

구분		광주	전남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감	완전반대	반대
	교육장	찬성 100%	찬성 64.7%
교원평가	교육감	완전반대	반대
	교육장	찬성 100%	찬성 88.3%
학생체벌 금지	교육감	찬성	찬성
	교육장	찬성 50%	찬성 29.4%
학생인권 조례	교육감	찬성	보통
	교육장	반대 100%	반대 58.9%
전면 무상급식	교육감	완전찬성	완전찬성
	교육장	반대 0%	반대 35.3%
정당가입 교원처벌	교육감	완전반대	반대
	교육장	찬성 100%	찬성 94.1%

학생체벌 전면금지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장들 간에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광주 교육장 2명 중 1명은 적극 찬성했고, 1명은 반대했다. 전남에서는 5명이 찬성했지만 8명이 반대했고, 4명은 중립에 섰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장들은 100% 찬성해 '반대' 입장이 명백한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와 대조됐다.

다만, 이들은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등 부작용 개선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남지역 교육장들은 11명이 찬성했고, 6명(35.3%)은 현행 제도에 대해 반대했다.

현재 시·도 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광주 교육장들은 '찬성하지만 일부 시행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답했고, 전남에서는 2명의 교육장이 교원평가 제도를 반대했다.

정당 가입 교원에 대한 중징계 처리와 관련해서도 광주 교육장들은 모두 찬성했고, 전남 교육장 94.1%(16명)도 이에 찬성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광주 교육장들의 반대 의견은 없었다. 이들은 지자체 예산지원 전제로 무상급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남에선 35.3%(6명)가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했다.

이처럼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시·도 교육감과 교육장들의 의견이 크게 상반됨에 따라 향후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시·도 교육청, 일선 교육청 등의 교육행정 주체와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교육 주체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교육장 인사권을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만큼 신임 교육감들이 앞으로 대대적인 교육장 물갈이 인사를 통해 자신과 의견을 같이하는 교육장을 늘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 의원은 "교육행정의 주체인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청의 의견이 모이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교육행정 주체들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교육감 대상 설문은 지난 7월 2일~5일 실시됐으며, 11월 임기가 시작되는 광주시 교육감은 장휘국 당선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신임 실국장 프로필

강왕기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경제통으로 굵직한 사안들을 뚝심 있게 처리해 주목을 받았다. 공직에 있으면서도 오사카 시립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학구파다. ▲한국방송통신대 졸 ▲경제통상과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마케팅본부장

정재현 시민교통국장 기획통으로, 꼼꼼하고 착실한 일처리로 신망이 두텁다. 부이사관 승진 후 본청에서의 첫 보직으로, 신설된 시민교통국을 맡았다. ▲한국방송통신대 졸 ▲기획관 ▲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예산담당관 ▲감사관 ▲남구 부구청장

홍진태 자치행정국장 업무 추진력과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와 문화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국민대 졸 ▲총무과장 ▲경제통상국장 ▲문화정책실장 ▲(재)광주세계광엑스포 사무총장

최현주 남구 부구청장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차분히 궂은 일을 맡아 처리했다. 부드러운 미소와 강단 있는 카리스마로 직원들의 신망을 받고 있다. ▲조선대 졸 ▲서울사무소 소장 ▲예산담당관 ▲공보관 ▲기획관 ▲경제통상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주 창조도시정책기획관 40대 초반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할 만큼 업무 성과가 뚜렷하고 조직 내 평가도 높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청렴도 평가 1위 달성 등에 기여했다. ▲조선대 졸 ▲대중교통과장 ▲투자유치기획단장 ▲감사관 ▲정책기획관

출발! 해양영토대장정 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해양영토대장정' 발대식에서 참가한 대원들이 모자를 던지며 출발을 알리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해양문화재단에서 공모를 거쳐 선발된 대학생 104명은 이날 평택항을 출항해 백령도와 마라도, 독도 등 끝단과 목포, 여수, 마산, 울릉도 등 주요 해양도시를 탐방하며 13박14일 동안 총 1750㎞의 항해를 한 뒤 17일 묵호항으로 귀항한다. /연합뉴스

여수박람회 62개국 참가 확정

OECD 등 3개 국제기구도…참가국 유치 순조

중점 대상국 44% 머물러…당초 목표에 미흡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참가국 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목표대로 참가국 유치에 성공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2008년 B1E(국제박람회기구)의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승인을 받은 뒤 참가국 유치 활동을 벌인 결과, 이날 현재까지 공식 참가 의사를 밝힌 나라는 모두 62개국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유럽 12개국(우크라이나·터키·아제르바이잔·스위스·독일·스페인·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루마니아·포르투갈·네덜란다·노르웨이) ▲미주 12개국(파나마·가이아나·엘살바도르·과테말라·도미니카공화국·페루·온두라스·파라과이·니카라과·콜롬비아·에콰도르·미국) ▲아시아 14개국(일본·태국·캄보디아·바누아투·베트남·네팔·중국·솔로몬군도·라오스·몰디브·몽골·파키스탄·마샬군도·인도) ▲아프리카 17개국(리비아·이집트·세이셀·코트디브와르·알제리·앙골라·튀니지·가나·나이지리아·모리타니아·탄자니아·말리·세네갈·부르키나파소·가봉·케냐·콩고민주공화국) ▲중동 7개국(사우디·예멘·오만·UAE·요르단·카타르·이스라엘) 등이다. 또 3개의 국제기구(OECD·IPCC·PEMSEA)도 공식참가를 통보해온 상태다.

지난 1993년 10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전박람회와 2008년 개최된 사라고사박람회에 견줘 여수박람회 참가국 유치는 순조롭다는 게 조직위 설명이다. 조직위는 올해 70개국 유치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낙관할 처지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자칫 소규모 잔치로 전락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조직위가 당초 2009년 50개국, 2010년 50개국 등 100개 국가 참가 유치를 목표로 세운 것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다.

지난해의 경우 50개국 중 36개국이, 올해는 50개국 중 26개국 만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또 엑스포 개최로 인한 관람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한 중점유치 대상국(34개국) 가운데 유치한 국가도 15개국(44.11%)에 머물렀다.

유럽지역의 경우 프랑스·이탈리아·러시아·그리스·스웨덴·폴란드·핀란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여전히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미주지역에서는 캐나다·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칠레가 참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이외 호주·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도 선뜻 참가 통보를 하지 않았고 최대 국제기구인 UN도 마찬가지다.

조직위가 당초 50개국을 중점유치 대상국으로 선정했다가 34개국으로 축소한 것을 고려하면 대상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지원 활동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조직위가 지난 4월 서울과 여수에서 박람회 참가 확정국과 유치대상국을 상대로 참가국 회의를 열고 참가국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편의제공 계획 등을 설명하는 등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